

“외교 정쟁 안타까워… 요란한 주장보다 결과로 책임져야”

李 대통령, 업무보고

“대한민국의 재도약, 더 나은 삶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할 수 있을까. 잠깐은 될지 모르나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은 조금 다르다. 이게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가 또 다르다”면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책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주장하는 게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

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 다르다”며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 주장하는 것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며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질서의 격변기”라며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부인데 역할이 더욱 막중한 부처들이 바로 이 4개 부처라고 생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부처를 일일이 거론하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정상회담이 워낙 많고, 해외 정상 방문도 많이 있다. 외교부가 요새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이어 “외교 분야에서의 접촉이 임기 후 반부에 가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임기 초에 해야 그 일을 기반으로 기업이나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기회가 커지는 것 같다”며 “외교부에서 이해를 조금 해달라. 임기 초에는 견여주고, 임기 후반기에는 날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게 어찌 보면 형식적이기도 하고 실효성이 과연 있나 싶기도 한데 특정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지하

게 정성을 다해서 하고 나면 많이 바뀌고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 같을 것이다. (북측에서) 반응도 없고 가끔씩은 안 좋은 반응도 생기는 하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거 아니냐”며 “요즘 관계가 매우 나쁜 상태인데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독려했다.

국방부에는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군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은 틈새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내일 징계논의 돌입… 조정태·진종오 반발

국민의힘, 7인체제 윤리위 회의
조정태 “윤리위, 공정성에 정면위반”
진종오 “위원장, 비밀유지의무 위반”
이달 중순께 당사자 불러 의견 청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현역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돌입하는 가운데, 징계 대상자들의 거센 반발과 윤리위 내부의 갈등으로 당 내홍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로 추가된 윤리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의 윤리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징계 대상자들에게 발송할 서면질서의 작성 등 징계를 위한 준비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위는 작성된 질의서를 통해 소명 자료를 받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이에 징계 대상자로 꼽히는 조정태·진종오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진종오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제 징계 절차는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 위원 5명 중 단 3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개시됐다. 그것도 위원장 뜻에 동조하는 이들만으로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당헌·당규에 따른 공정한 심의라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윤민우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독립성과 투명성을 요구해

온 동료 위원들을 표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해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정작 위원장 본인이 징계 대상자 명단과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를 외부인과 사전에 공유하고 상의해 왔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다. 동료에게만 칼 겨누는 위원장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조정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위원장 사퇴 촉구·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3조 1항은 윤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윤리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징계 대상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같은 사안에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리위의 징계가 더 탄력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특히 진종오 의원의 경우 ‘돌려차기 사건’ 발언 논란에 휘말린 상황이다. 앞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서범수 의원은 전날(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진 의원은 “저는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을 빚었다. 서 의원과 진 의원 모두 논란이 일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오하려 이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을 한) 사건들 때문에 (윤리위에서의 징계 논의가) 더 가속도가 붙게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께 국민의힘 전체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발언을 한 서범수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수식어로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피해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통스러웠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접수한 데 대해서는 “징계요청서가 접수되고 앓고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당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리위 내부의 갈등도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라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해임 조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우호한 윤리위 부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윤리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낸 위원들을 겨냥한 명백한 겁박”이라며 반발하는 등 윤리위원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송영길(왼쪽부터), 김민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친명 “권리 보장” vs 친청 “투표 쿠데타”

민주당 8·17 전당대회 투표 진행
친명 후보들 ‘추가 투표’ 주장에
친청 “사후 투표 난생처음” 반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당원대회(전당대회) 권역별 순회경선 및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추가 투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반발하면서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전당대회 순회 경선에서 당원들의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에 투표가 마감돼서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용·임미애 후보 등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번 전당대회 물인 ‘연설 전 투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투표 당원들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연설을 들은 이후에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세를 하고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가 끝난 뒤 뒷북 치고 유세를 한다”며 “미투표한 사람을 마지막에 모아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

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보완점을 검토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짚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 성향의 친명계에서 ‘추가 투표’를 주장하는 이유는 투표를 때문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온건 성향의 당원 참여가 많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이에 당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것을 넘어 투표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 및 친청계 후보들은 이 같은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끝났는데 또다시 사후 투표를 하자는 주장은 난생처음 듣는다”며 “이건 ‘투표 내란’, ‘투표 쿠데타’”라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강득구 최고위원의 ‘추가 투표’ 주장에 대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경쟁이 압박해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선호투표를 관철하지 않나,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 예외 인정을 통해 특정인을 후보로 만들지 않나, 이제는 추가 투표 주장까지 공공연히, 조직적으로 터져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표가 덜 나왔으니 많이 나올 때까지, 이길 때까지 투표 한번 해보자는 말인가”라며 “법도, 당헌당규도, 심지어 상식조차 내팽개친 것인가”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투표용지 특검 후보 김용관·차진아·최창호

국민의힘, 야당 몫 위원 3인 발표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야당 몫 위원 3인을 발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김용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던 법조계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오신 헌법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했으며 최창호 변호사에 대해선 “2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만큼 이번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라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주로 수행하셨다”고 설명했다.

/박경수 기자